

감사결과

□ 총 괄

감사결과 [표 1]과 같이 총 7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.

[표 1] 감사결과 현황

구 분	계	권고	통보	경고	주의	비고
처분	7	2	5	-	-	-

□ 주요 지적사항

1. 파출소 상황처리에 따른 상황관련 시스템 입력기준 마련 필요

- (판단기준) 「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」 제18조에 상황을 접수 받은 기관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, 파출소장은 해양상황신고 접수 시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상황실 보고 및 상황 종료 후에는 「조치사항」에 대한 종합상황보고서를 작성·보고하도록 규정
- (문제점) 상황실은 해양상황 발생 시 다수의 참가세력 관리·조정 등을 위해 상황내용을 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나 다수의 참가세력이 아니거나 상황내용이 비슷함에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입력여부가 차이가 나는 등 상황관련 통계에 영향 우려. 파출소는 상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상황보고서를 작성·보고해야하나 5개 파출소에서 직접 신고받아 처리한 상황의 95%가 상황보고서 미작성
 - (조치사항) 종합상황실장(상황기획담당관)은 현장부서 처리상황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입력 및 상황보고서 작성 기준 등을 관련 통계지표와 연계하여 관리방안 마련(통보), 구조안전국장(해양안전과장)은 파출소에서 상황처리 시 상황보고서가 관련기준에 맞게 작성되도록 관리방안 마련(통보)

2. 대형합정 수성막포 소화약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

- (판단기준) 소방청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「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 제3조('12. 2. 9. 개정, 1년유예)에 따라 유해물질인 「과불화화합물」이 함유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

* 소방청(소방산업과)-3445('18. 10. 25)호 "수성막포 소화약제 사용중지 및 친환경 포소화약제 사용 협조"

- (문제점) 해양경찰에 보유 중인 대형합정 36척 중 29척은 '13년 2월 이전 준공되어 선박건조 시부터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기관실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분검사 등 관리기준이 없음
- 화재발생 시 수성막포 소화약제 사용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

* 화재진압용 포소화약제 독성 있어 환경오염 우려(□□일보, '20. 11. 13.)

* 소방청은 과불화화합물 함유 수성막포 소화약제 전량폐기 조치 완료('14. 11. 3.)

* '18년 소방청은 수성막포 소화약제 사용중지 관계기관 통보 : 해양수산부(○), 해양경찰청(×)

- (조치사항) 장비기술국장(장비관리과장)은 해양오염방제국(기동방제과)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대형합정(특수정 포함)에 보관 중인 수성막포 소화약제 성분검사 및 친환경 포소화약제 교체 등 관리방안 마련(권고)

3. 광역방제지원센터 개인보호장구 관리방안 마련 필요

- (판단기준) 「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」 제6조('10. 10. 21. 제정)에 해양오염사고(화학)가 발생한 경우 방제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·지원을 위해 초기용 개인보호장구 6,000세트(7만원/세트)를 각 3개소 광양·울산·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하도록 규정




* 6,000세트 비축기준 :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('07. 12. 7.) 이후, 방제기자재 비축기준 연구용역('09년)을 통해 행정규칙 훈령 제정('10. 10. 21.) 시 반영

- (문제점) 확인결과, 매년 방제자재 구매 예산 부족*으로 방제기

자재 ①초기용 개인보호장구 비축량 부족, ②유효기간(2~5년) 경과 방독마스크 필터 미 교체 보관

* 최근 3년 방제자재 예산 : 2022년(506백만원), 2023년(422백만원), 2024년(480백만원)

<광역방제지원센터 초기용 개인보호장구 현황>

지원센터	비축기준량	현보유량	①초기용 개인보호장구 부족수량	②유효기간 경과 방독마스크 필터 수량*
□□	6,000세트	3,460세트	 2,540세트	 2,500세트
○○	6,000세트	3,625세트	2,375세트	 1,600세트
◇◇	6,000세트	3,860세트	2,140세트	50세트

* 이번 감사 중 유효기간(2~5년)이 지난 필터는 전량 폐기 권고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

- (조치사항) 해양오염방제국장(방제기획과장)은 광역방제지원센터 내 유효기간 경과 된 방독마스크 필터 및 초기용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기자재 운영·관리방안 마련(통보)

4. 현장 임무장비(안전모) 도입 안전인증 기준 마련 필요

- (판단기준) 임무활동 시 현장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(안전모)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산업안전인증(KCs)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·보급하는 것이 타당
- 특히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 등 활동목적에 따른 각종 안전인증(KC, KCs 등) 기준이 다른 만큼, 안전 성능 확보가 요구되는 개인 임무장비 도입의 경우 장비별 명확한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(중대재해예방)

┌ KCs :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마크

└ KC : 공산품(일상생활용품)에 대한 안전인증 마크(인증기관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



❖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‘21. 1. 26. 시행)에 따르면 사업주(경영책임자)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(사업장)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 확보의무(치안·구조 현장은 산업현장 간주 우려)

- (문제점) 그런데 최근 3년간(‘21년 ~ ‘23년) 총 16억 원(7종 8,800점)의

다양한 안전모 구입·사용 중, 7종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일상생활 인증 및 인증 확인이 되지 않은 사용부서의 “개인 사비 구매 안전모” 착용 사례 등 사용 제각각

- 더욱이 함정요원 안전모의 경우 일상생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

<함정 개선안전모 및 스키용 안전모 현황>

모델명 : 'ㄱ' *동일모델		함정용 “개선안전모”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일상생활용 “운동용 안전모”(KC 인증) 임
개선안전모(함정)	스키용안전모(시중)	
		

- **(조치사항)** 운영지원과장은 유관부서¹⁾와 협의하여 각 기능(일선 관서 포함)이 일선 현장요원들의 개인임무장비 보급시 안전인증 기준을 제시·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예방대책에 반영,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 마련(**권고**)

5. 신조함정 예비부속 관리기준 마련 필요

- **(판단기준)** 「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함정 장비와 기기부속은 제조사, 제조일, 재고수량 및 제원 등을 기록·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2013년부터 통합장비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·관리 유지
- 따라서 해양경찰장비인 함정의 예비부속 등 재고수량은 건조사로부터 신조 함정 인수 시점부터 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할 필요
- **(문제점)** 2021년 이후 신조 함정 14척을 대상으로 건조사로부터 인수 받은 예비부속과 시스템 입력 재고를 확인한 결과 50% 이하*로 등재

* 신조 함정 14척 대상 인수 당시 건조사로부터 받은 예비부속 합계 9,559종 36,971점 대비 시스템 등재는 3,870종(40.4%) 18,110점(48.9%)으로 관리 미흡

- 원인분석 결과, 신조 함정 인수 시 「시스템 등재 세부기준(등재

1) 경비국(경비작전과, 항공과), 구조안전국(해양안전과, 수색구조과), 장비기술국(장비관리과)

기한, 등재 대상 등)」 부재로 일부 함정은 주기, 발전기 및 추진기의 예비부속에 한정하여 등재

√ (현장의견) “신조 인수 최초 재고등록 시 시스템 사용자지침이 간략하고 평소 시스템 구성을 모르는 일반 함정 사용자가 스스로 등재하는 것은 한계, 부속 리스트(APL)에 일부는 단가와 물품번호가 누락되어 입력에 어려움을 겪음.”

- ▶ (조치사항) 장비기술국장(장비관리과장)은 건조사로부터 함정 인수 시 시스템에 예비부속 등재가 누락 되지 않도록 “장비별 예비부속 세부 등재 기준”을 마련(통보), (장비기획과장)은 건조사로부터 함정 인수 시 장비관리과에서 마련한 “장비별 예비부속 세부 등재 기준”에 맞는 장비목록(예비부속 포함)을 제출받는 방안을 마련(통보)